

구분	현행헌법	민정개헌안	新民개헌안	국민개헌안
前文	계승정신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4·19민주이념추가	4·19민주이념추가 제5공화국 삭제	4·19민주이념추가 제5공화국 삭제
總綱	軍의政治不介入 공무원재산공개 정당해산		제한할 권리신설 개입금지조항신설 법률에 따라 공개신설	
基本	신체의 자유 구속적부심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자유제한	「拘禁」은 법률에 의해 법률에 의해 보안처분 법률에 의해 제한	체포 拘禁시 가족에 통지 현행유지 모든 구속자에게 보장	「拘束 拘留 軟禁」은 법률에 의해 刑의 선고에 의해 보안처분 刑의 선고에 의해 보안처분 법률로 제한不可
本	선거권연령 형사보상 의무교육	20세 무죄피고인만 해당 초등교육	20세 무혐의 피의자도 해당 현행유지	18세 무혐의 피의자도 해당 중학교교육까지 확대
權	중요 산업체 근로자 단체행동권 유보 국민의 자유와 권리제한	법률로 제한 또는 不認定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보대상을 엄격제한 삭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삭제 삭제 현행유지 현행유지
大	지위 부통령 선거방식 피선거권 임기	국가원수 국가대표 선거인단間選 5년이상 국내거주 7년 단임	상징적 국가원수 국회에서 선출 현행유지 5년 1차중임	행정부수반 국가대표 신설 국민直選 삭제 4년 1차중임
統	중요정책의 국민투표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형식적 국민투표 회부권	삭제 삭제
領	비상대권 국회해산권 입법권	헌법적효력의 비상조치권 기본권 잔정정지 및 정부법원권한 특별조치 기능 있음	수상의 요구에 의한 형식적발동권 없음	법률적 효력의 긴급명령권 재정경제처분권(약화) 삭제 없음
(首相 國務總理)	선출방식 주요권한 자문및직속기관	대통령임명(국회동의) 대통령보좌 및 행정각부통할 없음	국회선출(대통령이 지명) 계엄선포권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구성후 2년내 재출권 국민투표회부권 외 교권 각료 및 공무원임명권 감사원 국가안보회의 국정자문회의 평통자문회의	현행유지 현행유지 없음
國務會議	기능 심의안건	중요정책심의 개헌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중요 국정사한 의결 국정전반	중요정책 심의의결 개헌안 국민투표안 제외 개헌안 국민투표안 제외
國	임기 리레대표제 의회국회 소집 행정감사권	4년 있음 대통령포는 재적 1/3이상 기 年 150일 초과금지 특정사안의 조사권만 인정	5년 있음 수상 또는 재적 1/3이상 현행유지 국정조사권 발동조건 완화 (후임수상선출후 可, 내각구성후 2년내不可)개별교섭불신입명	4년 있음 조항삭제 대통령포는 재적 1/4이상 총회기 규정 삭제 총회기 규정 삭제 일반국정의 감사권 조사권 일반국정의 감사권 조사권
會	불신임권 대통령탄핵발의 탄핵결정 의장의 회의비공개권 국무위원 출석의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재적의원 과반수 헌법위원회 있음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로	수상(후임수상선출후 可, 내각구성후 2년내不可)개별교섭불신입명 현행유지 헌법위원회 있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재적의원 3분의 1 탄핵심판위원회(신설) 없음 재적 1/4이상 요구추가 현행유지
法	대법원장임명 대법원판사임명 일반법관 임명 대법원장 임기 위헌심사권	대통령이 국회동의언어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 5년, 連任不可 헌법위원회	수상提請, 국회同意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추천, 수상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 현행유지 대법원	법관추천회의提請, 국회同意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동의언어 제청, 대통령이 법관추천회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임명 6년, 連任可能 대법원
憲法委員會	위헌심사 탄핵 정당해산	탄핵, 정당해산	폐지	폐지
地方自治	자치단체장 선입방법 법률에 위임	현행유지	자치단체장 직선	자치단체장 직선
改	제안 확정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1백만인 이상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로
附	입법회의 통과 지방의회 구성 시기	효력지속 재정자립도 감안해 순차적	현행유지	삭제 삭제 새헌법 통과후 1년 이내
則	대통령등 선거	대통령은 임기 만료 30일전 에 취임자선거	국회의원은 새헌법 시행전 60일, 대통령은 45일, 수상은 30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현 대통령 임기 만료전 6개월 개시일 30일전에 국회의원을 새 대통령 임기

: Konrad Hesse

- 헌법은 역사적으로 볼 때, 법률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규범으로서 나타나고 이 때문에 때때로 어느 한 차원에서 적용되는 법규범이 그대로 다른 나라의 헌법에 도입될 수 없다. 그러나 자치에 있어서는 문제의 제기 뿐 아니라 이 문제들을 법규범 체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도 공헌정인이다.

• 법규범의 과제라 기능:

- 政治的統一의 실현과 유지

의미 = 政治的行政統一체

정치적 통일: 現代 多民族的社會의 政治적 統一에서 활동. 분권주의.

많은 존재의 분권적 임무 (相稱적의 분과 이해관계, 共同의 政治적 活動의 實現, 自由)

- 다양한 개별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政治的 行政 活動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곳에서
- 議會나 多數派의 方法으로 政治적 目標을 實現하고 싶은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곳에서 政治的 行政 統一체로서의 意義는 봉기된다.

- 法秩序의 創設과 維持

5 共 集 法 :

送集市田에 관한 句 題 : 직접 送集市田에 대한 功 用 是
기 能 是 否 的 考 査 的 意 義
(送 集 市 田 的 代 理 人 的 意 義 考 査)
정 實 考 査 的 意 義)

- 送集市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에 關 連 的 意 義
→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送 集 市 田

○ 憲法 : 共同體의 法的 基礎 秩序 로서의

- 憲法은 공동체 내의 갈등을 극복하는 절차 마련

○ 憲法은

- องค์กร으로 그의 權限을 限制할 수 있는 機關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法 분야와 別로 區別된다.

- 法의 權限은 國家의 權限에 對하여 保障

- 憲法은 자기 자신의 權限을 保障하지 않으면 안된다.
→ 자신의 權限을 保障할 수 있는 가장 有效한 手段이다.

○ 憲法 : 國家의 組織에 對한 技術

↳ 권력에 대한 자유의 保障을 의미하는 自由의 技術.
↳ 國家의 自由의 保障의 技術.

- 理論上 2 系統 위한 類型의 別로 分類한 例의 :

· 直接 民主制 → 代議 民主制

· 代議 民主制 : 國民의 代表의 行爲에 對하여 自由한 意思로 行爲하는 制度

多數 民主制 : 多數의 意見을 尊重하는 制度
양당제 (2黨으로 行爲하는 制度)

· 內閣 責任制 : 內閣이 議會에 對하여 責任을 擔當하는 制度
↳ 國家의 行政을 行爲하는 制度

대통령 制 : 國民의 選出을 經하여 行爲하는 制度
↳ 國民의 自由를 保障할 수 있는 가장 有效한 手段이다

- 制度 당시의 現狀은 2 種제인 法
그 外의 法을 制定 する 爲한 法에서
정치적 自由를 保障하게 된다.

• 憲法의 制定 (P. 100)

헌법의 아버지: 憲法制定에 있어 그 功勞가 큰 政治家는 人들

英: Thomas Jefferson, James Madison

法: Sieyès, La Fayette

德: Hugo Preuss

佛: Michel Debré

• 國民會議

- 國民會議에서 制定하는 경우:

- 通常議會: 1789년, 1830년 프랑스의 혁명
1860년 이탈리아의 혁명

✓ 國民會議의 制定은 國民의 參與에 의해서

國民의 代表, 議會 代表의 參與에 의해서

• 制憲議會: 大體가 國民會議의 制定을 爲한 國民의
代表 參與에 의해서

1789년 美制憲議會

1793, 1795, 1848년 프랑스 혁명

- 國民投票에서 制定하는 경우:

• 國民投票 (M. 200, 席政을 위한 國民投票)

- 國民의 直接參與에 의해서 制定하는 경우

• 佛: 國民投票 (Michel Debré 주동) 국민투표

- 代議制과 國民投票의 結合으로 解決되는 경우!

✓ 代議制에 대한 불신에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國民의 인구는 民主議的思想의
發展의 要素라는 이론에 기원.

✓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國民의 參與의 자기모순 논제
우려: 1차 4차 헌법 제정의 경우 (1945)
의회외적 헌법 - 國民投票 문제

제헌헌법의 의의 - 國民의 參與
國民投票에 대한 의의 - " 國民의 參與에
대한 의의

- 1946년 프랑스 4차 헌법 - 초대 국가원수 헌법상에서
국민의 헌법제정권 행사와 가장 민주적 양식
1. 3차 헌법은 2차로 불거지거나, 새 헌법제정하
장안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결과
2. 制憲, 國會 選出
3. 憲法 制定: 정부간여 없이 헌법을 작성.
4. 國民投票으로의 가결.

✓ 憲法問題의 解決에 活用

예: 프랑스 - 제3차 헌법 제정 문제
이탈리 - 共和國 憲法의 制定 (1946년 12월 22일)

2. 372의
概念

✓ 헌법기 유제된 개정전체에 따른 헌법규정의 변경

✓ 헌법의 파괴:

헌법개정헌법 2 자체의 修改 - 革命

1789년, 1793년 헌법 - 프랑스의 조국리 페지

1917년 - 러시아 헌법에 의한 조국리 페지

- 조국리 페지 - 국가의 同 義로. 연속성의 문제

✓ 헌법의 정본과 원칙유지해제 규정의 일부만
全部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修改

憲法の 廢除: 헌법의 정본, 원칙 修改

憲法에 관한 372는 243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괴나 變

✓ 헌법규정의 일부는 全部는 廢止한 위헌에서

憲法の 停止: 비상사태시 헌법의 일부규정의
效力은 停止

憲法無視的 憲法停止

憲法專權的 憲法停止: 계엄, 비상대란

憲法の 特別措置: 개정전체는 유지 않고

헌법규정의 일부는 變해, 다른 조치 취하는 것.

憲法無視的 - 후(나폴레옹에 의한 憲法廢止)

(1848.11.4. 568 憲法廢止규정 제1조)

국회무효로 의회의 의사능력을 상실케 함)

憲法專權的 - 헌법개정전체나 같은 정본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이 命한 Weismann

의 경우 (1922.10.21)

✓ 위상권은 헌법의 일부임 전부 반대
 憲法의 表裏: 헌법규정의 의미 그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짐.

3. 改正
 憲法

- 改正의 方法
- 特別改正의 界限
- 연방의회와 의결. 각국의 기준
-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

• 헌법규정이 불사. 국회의 의결 개최하지 않음으로
 재부의 헌법개정안이 직권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진데
 국의 다수결로 개정안으로 하도

1962년 프랑스의 헌법개정 (데골총장직선)

- 프랑스의 대법원 반대. 59. 개헌에 兩院 反對
- de Gaulle: 511. 공천령의 조정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한 국민투표권한 511을, 직권
 국민투표에서, 가짜
 뒤베르그는 憲法 31조

헌법개정과
 憲法 31조

4. 憲法改訂의

限界

• 法案의 範圍 : 한계 없다.

• 헌법개정권 : 限有의 權限, 立憲과 같은 本國의 權限이긴 非常的 權力으로 이해할 때 그 範圍에서 부러진 限界가 있음.

✓ 超越的 限界 :

↳ 사회적 경제적 기능의 作用을 超越한 立憲의 立憲의 權限의 範圍에서, 그 權限의 範圍에서 보장할 수 없는 權限의 한계.

✓ 內在的 限界 :

立憲의 決定으로서의 한계는 立憲의 範圍에서 限有한 한계.

✓ 未定的 限界 :

明定의 權限으로 立憲의 한계 未定한 경우

- 立憲의 內在的 限界를 未定한 경우

- 立憲 가능한 것을 明定으로 한계로 立憲한 경우 :

內在的 限界 아니므로 立憲改訂의 範圍에서

↳ 立憲이 언제나 가능하다.

• 限有의 權限의 標準 :

憲法의 自同性과 連續性

<보장하는 요소>

• 立憲제 立憲의 權限, 立憲의 權限을 保障하는 기본권

• 立憲制, 立憲제 立憲제, 立憲의 權限

<신민당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

No. _____

1. 대통령이든 원칙으로 대해서
12월 12일을 내내 계속 회의하는 것이다. (안 제 83조)

대통령은 총회에 대하여 책임은 지지 않는 대신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연내 책임은 지고, 하정권
(안 60)

→ 2종의 憲政體制 變遷을 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國會議員의 신임: 국무회의의 주권으로 (안 83)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안 84)

2.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 삭제 (84)

「필요하다」는 인정할 때에는
부호, 12월, 1월,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재판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 해산권 삭제

제 131, ② 개정안: 국회의결을 30% 이하 국민투표
국회의결을 30% 이하 국민투표, 2/3의 과반
안 812 국회의결을 해산

4. 대공채의 해부시점(해부)의 산정
안 5121 ①

5. 前文 株式投取:
「이 문항이 처리되는 해법에 관련된 공채의
기부채권인권이 명백하게 침해될 경우
공채채권 저당권 관리가 있음을 제외하여서」

6. 保費處分: 株式 處分에 한하여 (안 511 ① 후단)

「... 株式 處分에 의하지 아니하는
處罰, 保費處分, 強制處分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

7. 株式 處分 方法의 處分: 株式 處分에 한하여 (안 512 ① 후단)

8. 株式 處分에 對한 保費 處分 (안 526 ①)

9. 株式 處分에 對한 同 保費 處分에 對한 株式 處分 (안 528 ①)

10. 株式 處分 ③ 株式 (공채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부채채권)

0. 헌법파리와 기본권침해에 대한 저항권인식

- 자유 헌정의 종래나 상례를 벗어난 헌법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수호를 위한 조력자로서의 저항권. 즉 헌의 기본권은 신성불가침의 전제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법전문에 헌법적 주제를 두는 주장.
-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일부 중의 하나가 헌법적 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헌법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헌법파리를 예방하고, 조법지서를 유지하는데 악우에로 불사하고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총헌법제, 사생활의 힘이 행사는 함헌정으로 주장하는 점을 반박할 목적임.
- 총헌법제 반법에 대한 기본권자의 파괴행위를 함헌 하하는 것은 민주정체권자의 저항에 대한 위해를 총재할 우려가 있고, 헌신적으로 반정부폭동, 시위를 함헌적이라든 같은 변위거나,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에 의한 총헌법제문란행위를 주장 할 위험이 있음.
- 독일기본법 20 ④.

○ 대졸생 직선으로 12타 동년대의 공약이며 양쪽이
때문에 비가져 원상회대로, 비가져 원상
주장이 대가져.

- 12타 동년대의 직선제 주장은
대졸생과 재부정태를 전제로 한 것임. 다른
재부정태를 재정태는 것이 공약위반 아님.

- 재부정태. 동년대의 위한 주장은.

기(體)의 종류:

人身: 자연적 상태의 인간.
문화적 의의의 인간

人身.人格: 그 자체로서 그의 문화
사회적 의의인
주체적 인간

- 개인의 자유는 국가적 문화에 의해서 그 목적과 성
- 자유방임의 의의에 위대한 국가의 문화로
- 자유방임의 목적을 의미.

- 정신적 인간에 있어서 자유의 보장을
국가의 중립 아닌 국가의 문화적 정수(정수)가 있음
→ 後者的 自由

국가의 문화적

- 절대적 자유: 주체의 문화에 따라 아주 제한함의
- 타인사회의 관계에서. 사회의 관계에서 자유,
ex. 재산권의 보장.

- 思想의 자유나 같은 개념적 자유도
그 자체로서 그의 문화적 자유의 보장을 수반하는 것은
양상에서 제한된 인간
- 상대적 자유: 모든 사회의 공적 신앙.
자유 문화에 대한 인간적

파시즘, 나치즘, 등가(정신적)

- 프롤레타리아, 국가, 민족과 같은 자연의 가치를
정제화 -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성 루스(St. Just)

자유에 대한 자유란 무엇인가.

서프가 본래의 의미.

+

• 계층의 기본적

9 前文

- 4.19 민주이념 추가 (196만)
인사장부작성등 함께
- 제5 공화국헌법 (신민. 국민 통합)
국민제정헌신서약 (신민. 통합):
5.18. 6.10. 헌법 추가 (통민):

개정연혁:

- 제1회 헌법 전문. 1960년 헌법전문은 동일.
- 62년 헌법 : 「4.19위거와 5.16혁명이 이념에 입각하여,」
추가. 48. 7.12. 제정된 헌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로 변경.
- 72년 헌법 :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영사 및 사민정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음 문래와는」
의 추가.
- 88년 헌법 :

가계부 방향:

1. 현행세금 조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부담 완화
개별세율, 세율 누진 완화

2.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방향:

- 민중사이 사회적 규제를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 부담 완화, 법인세 부담 완화, 상속세 부담 완화
소득세 부담 완화, 법인세 부담 완화, 상속세 부담 완화

- 역사적 사건 처리를 위한 조세 부담 완화.

- 역사적 사건의 양호 조세 부담 완화, 2. 이연 조세 부담
가계부 방향에 따라 조세 부담 완화, 상속세 부담 완화
소득세 부담 완화, 법인세 부담 완화, 상속세 부담 완화

가계부 방향에 따른 조세 부담 완화

- 조세 부담 완화 조세 부담 완화
- 대안 조세 부담 완화, 조세 부담 완화
- 새로운 민중사이 조세 부담 완화, 조세 부담 완화
- 조세 부담 완화 조세 부담 완화, 조세 부담 완화

총합 (51 - 58)

①. 재취득비 반환의무 명문화 (52②)

②. 취득세액의 과세연계성을 과세연계성으로 (연세취득세제 미) (57④) (추가)

(新) ③. 취득세액 과세연계성 규정 명문화 (54②)

전년도 공익연에 포함. 공익연에 재취득증과
과세연 56④ 과 공익연에 포함되는 규정

- 공익연 과세연 명문화 (56③)
 - 공익연 과세연에 규정.
 - 과세연에 과세연 명문화
 - 수용가능.

기분전 (59 -

• 권인중에게 대한 추가 배상 기준:

즉 28 ② 유년원상 선상. 권인중유지.

- 권인. 명장풍, 법원권한자
- 전특등 각무장행과 관원권한 다른 등비어려움
- 법원권한 자는 배상 위예
- 공무원의 각무상 불행행위인하는 도래배상 재구안수 없다.

- 부원 관제 법령에 위하여 배상 받은 경우 가만 2 재배상 배상안수 있는 법원권한 마진.

- 배상 도래까지 부원권한 시장.
- 전특사양 : 부원배상 배상.
- 각급권한 사양 : 배상위예 및 사양 배상
- 높은 배상 시 배상 위예는 법원권한 안수 가능.

- 이종배상 금지 규정 삭제. 법령에 위하는 배에 위하여 배상.

- 3항시 이종배상 금지의 추가배상 배상이 위하는 관원권한 것은 배상 위예 규정 적용 때문. "법원이 위하는 배에 위하여" 추가 배상 받은 경우 1만 배용 배상 위예 안된다.
- 주변의 인식.

◦ 團體行動の對する影響：
多引。

○. 목차 전체의 주제 중시 문제

7.13. 2018년 전반기 회의:

1. 1분과: 전문: 인사팀, 경영지원팀, 재무팀, 기타 부동 부서 등

주요: 인사팀, 경영지원팀, 재무팀
2018년 실적 → 2019년 실적

기타: 9개 사업팀 회의

2. 2분과:

1. 부동팀: 부가

2. 부동팀: 부가

3. 인사팀: 6년 단임, 4년 1차 임명

4. 인사팀: 인사팀

5. 인사팀: 인사팀

6. 인사팀: 인사팀

7. 인사팀: 인사팀

8. 인사팀: 인사팀

9. 인사팀: 인사팀

10. 인사팀: 인사팀

11. 인사팀: 인사팀
12. 인사팀: 인사팀

13. 인사팀: 인사팀

14. 인사팀: 인사팀

2018년 실적: 인사팀 실적

3. 3분과: 경영지원팀, 인사팀, 재무팀 등 → 2019년 실적

• 윤리성: 윤리적 정당성은 다자야. 그자본은.

- 유기성: - 개편의 필요성: 동양의 입장에서 (여야의)
- 공정성: 당사 밖이 어떤지?
- 의정: 개편안 또한 주안점에 대해 위한 개편의견 취할때는 (사면)

I. 前文:

김정원: '공화정기개입금지' → 동양정치적정당권한에.

- 이각성: - 개편의 필요성 - 득표율
- 국민이식한 자제 필요.

- 신기성: - 개편 - 득표율의 차이를 이야기.
- 우리의 위상: 지금처럼 존재함. 다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지 않아 한다.
- 선거 필요.

후보에 대한 비판 } 해결해야 할 문제
 또 다른 시비
 - 권위 정리가 개입 금지 문제 안목이게 표명하진 못함.

II. 本論:

- 조항에 준 정외부개입 실효의견 있음.

III. 結論:

- 1. 본론기분:
 - 입문부: 제의 선전에 위해서만 (해당부분은 불사)
 - 문장기: 본론부분 문제지은.
 - = 행정의 단점에 의해 본론부분 과제를 하자는 주장이 다함.

2. 특내의 집회 주제 문제:

- 일인원: time, Place, Manner (복, 신발)
- 헌법상에서 동여두고, 법에서 제한.
- 차등주의.

3. 선거연령.

- 18세 인가 분다.
- 투표 자합성.

4. 국민증에 대한 조세비상기준:

필수적인 경우.

5. 단호의 행정규칙 - - 국가의 ③ 식제의견

① 라서에 의해서만 주지

필수적인 조세비상 기준의 본질적 사용에 대해 결과.

6. 조세비상 기준 적용: 필수적인 경우

필수적인 기준을 하기 위해

7. 8. 9 85 일차의 필요

- 경영권 이전: } 강제적으로
- 이익권 이전: } 다른의 이익.

IX. 전락 규정.

1. 부흥양제:

2. 후분자양제:

- 조세비상 기준: 3회, 조세비상 기준을 초과 했이 주지
- 모든 분기 - 후분자양제 안됨

3. 임의 증입제:

- 5-6년 간임 - 5년 간라 사정 (조세비상)
- ~~5년~~ 4년 증입 - 0
- 4년 증입 - 不可.

재정정책: 5.18 불가. 선거권 확대 불가. 부동액 불가.

백계개혁: 단임제, 4년중임 > 어느 쪽이 국민 지지 받을까?
(4.4가 과두정치)

비선정동: 임기문제 협상 불가. 협상당하려면 ~~4.4~~
거음부터 4.4로 가야.

과거개혁: 7년 재임, 6년 단임 불가. 4.4로 가자.

이 자문: 대통령 직선 프랑코에는 4년 중임 비표.

4. 주민 투표: 현행 헌법대로.

5. 비상정지권: 유감됨.

- 임무권: 경제개혁 개혁이 행정, 긴급명령으로.
- 이 권한: 정치, 다만 유권 압박이.
- 비상권: 적지적 할 필요가 없음.
- 유권권: 상제이전. 천도행사 정치 헌법에 규장.

6. 국회개편안:

유형: 해산권, 외국회개산 불가.

집중권: 국회에 해임권 인정하면. 해산권 같이 타당.

임무권: 파산제가 원칙 (대통령제미)

7. 자문기구: 존속.

8. 국무회의: 상회기관.

9. 국회인사위원회: 수권인사를 무방

10. 회기: 제정헌법 상제.

11. 국정조사권: 문헌을 보라는 것도 사권 부활이 바람직.

12. 불감, 국무위원 해임의 경우 → 해임권고 →

13. 대통령, 대법관 선출방법: 법관 추천회의

4. 가계부흥: 1) 비가계 부흥에 포함.

(여성이
의견)

2) 여성회 부흥: 주일학교에 뒤겨서는 안된다.
다.

한편으로 여성회도 남의 회로
되오. (교회의 회로)

(여성이)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
(남·여 동등)

3) 30 30

○ ← 「교회의 회로 및 관련된 문제가 대외에 남(남) 평등 원칙을 수선(수선)

○ ← (여성이)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 「평등」

4) 30 (부흥)

저소득층 여성회, 노인 회, 장애인, 신회, 장애인.

- 가정 부흥 사업: 우리 계류용.

5.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의 의미.
모든 동등. 우선권이 보장되어야 함.

- 전문: 임산법등.
- 대를 영전한: 주안출노.
 - 조부회어 - 의계기대.
 - 조부위인 - 라반수 의권경직.
- 3권부능 영위회.
 - 북통령 분포.
 - 편사행사기
- 부처: 공회익신 선기시기: 등시선계방안경도.

9. 조익분: - 전문에 임산법등유기 때로. 역사적사건나 열분류
 - 지향수신 유가 반래
 - 문인정신 " " " " " "
이정 등이 한양안문이 분기

10. 이찬성: -
- 1) 공복신 제의 전근로에게 노를 3권 보장해야.
 - 경제사정 위생이로 현요.
 - 노를 재의 증 함포장 재의는 (구 12만)
 - 전신으로 유상현요: 재계 불공(2)의 경제 수(89).
 - 2) 경영참가권:
 중앙위 지라제: 20% 100만명9 찬사
 자발적으로 경영참가의 임종.
 - 화위법안 등 주어 현요
 " 산업 민주화 등 위(2)여 "
 - 3) 이익 분배권:
 - 150억 자라. 전라사장안의 위(2)사용.
 - 위(2)공인성 유보. 출사. →

(6.29 시안 수화화 작업)

11. 반구조화: 10.26을 가한 나무 때를 5.17로 줄인
나무 많이 수화화한다. 문이 열리면 문은

- 구조: 호화 (간단)] 異見 → 직선수용
야구: 직선수용.

- 이야기는 이견없음.

호화는 언뜻 문이 열리면 - 대들림이 생기면 문이 열리면
직선으로 바뀐다. 호화는 언뜻 문이 열리면

-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 호화 (간단) 시안 시기: 대들림이 생기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12. 이안수화: 대들림이 생기면 문이 열리면: 호화 (간단) 시안 시기

-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13. 이안수화: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호화 (간단) 시안 시기

1. 호화: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2. 이안수화: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14. 호화: 1.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간단) 시안 시기

2. 이안수화: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1) 심신적 손상제로 상존: 경자유전 원칙 명시

19. 입법: 전문:

(선거연령: 18세 이하 불가)

대통령선거

부통령

1. 고교3 내지 2세, 사회경제적 불평등
한정영역 불평

2. 민생상 생활 20세

3. 호인 리빙엔 친후한자등이 필요

4. 공약으로 18세 → 응시자격연령

- 760000가, 이익권선 X

근로기준법: 취업연령

20. 지역제: 중립자본주의 > 중치 필요
평등자본주의

이해 4: ^{지역} 2라 할지 - 중심 상향연

정착수용 - 일북 중심 상향연

(건설제 추진)

21. 지방제: 3.1. 중심 → 순후선영

6.2. 농민생계 전투등

후국영역은 도한 안됨

중개영역의 특성 바인 "민족적 후국 리빙은 키어
생인" 을 상향제 추진

- 중앙 후가 바인 시켜하는 점, 이해로록

22. 후국제: 1. 제정외외상 전문 살기는 방향으로

2. 순 정정제임까지 규제 불요

제정외외. 제정 후분

3. 대통령 후보자제: 국내 계속 5년 거주

23. 방산제: 복지문제 중요

- 반부정부

- 민주화

2020. 헌정 복지 실현

인간개발지수 : $\left\{ \begin{array}{l} \text{복지향상} \\ \text{환경향상} \\ \text{건강향상} \end{array} \right.$ 때문 때문.
「보건」에 관하여
「진박한 용어 변환(안)」
표현이 더 좋다.

24. 기금종인:

- 자유유가: 경영철학, 이익형성권 주체만 나와 있음.
- 자본주의 원형 유지 조가 없음.
자본주의 본래의 개개인의 자유를 주체로 하는 것임.

- 산업화 과정 중 보이지 않는 권력 상승 - 경제력
주체 위한 틀 만들어 주어야 함

- 정부: 민간적화 부분 규제 필요

↳ 자본주의 극대화: 타인 통제 배격
정부의 개입 최소화

↳ 위와 같은 틀 마련 (위정사비 없게)

2020 ②. 개조

- 시장, 양자, 소득의 적정분배 } ← 정부
- 시장 지배, 경제력 남용 방지
- 경제, 산업, 민주화
주체간 조화

양자: 중앙은행 독립

- 2차 시사잡란: 연약.

- 25. 이영욱: - 선언적, 추방적 추방 많아 문제.
- 한국화, 부르라는 표현
- "다양성"이 아니라 "비주류"의 기성인을 깨닫고

- 정보 리서치

- 3차 1차, 독자화 지양: 대동강 3차와 분산.

- 문화정책: 대동강 문화보존
 - 3차 1차 2차에 대한 수정
 - 정보 리서치
- 3차 1차 2차에 대한 수정
 - 3차 1차 2차에 대한 수정
 - 3차 1차 2차에 대한 수정
 - 3차 1차 2차에 대한 수정
 - 3차 1차 2차에 대한 수정

• 보안처분: 법원의 주재에 의해 (정당유지)

• 2차 1차: 변질(안)

자유의 표현을 막고 있는

위법한 점 존재

] 정보 리서치

2차 1차에 수정이 있음

2차 1차에 수정이 있음

26. 이영욱: 개헌 방향

1. 권력 분산! 직선제 대통령이라든 권력 분산이 중요.

ii) 간접제 대통령제에 대한 인식.

2. 기본권 선언장

iii) 대동강 문화보존 계획: 3차 1차 2차에 대한 수정

법적 후생의.

- 문화보존 계획

양이므로 2차에

정확히 수용하는 점 (2004)

- 개헌 국민투표안: 두 차례 투표 (50% 이상 투표)

투표율 90%.

대통령이!

<강>

- 민주주의의 본질적 원리라 가치 존중
-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에 안배. 병행 추구
- 남북 분산론자의 위기론에 주목 - 한반도 평화 이야기는
이른 바자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 선택권 보장
- 장외 정치. 해외 투자의 활성화 방안

<강>

- 민주주의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과 성장과 자유의식 그리고
 - 권력의 분산은 다면적 접근 - 효율. 능률, 경쟁력
제외 가능하게
 - 자유. 민주주의 가치의 이상에 도달하는 방법
 - 전진적. 확실한 발전 전략을 내놓을
- 전진적 민주화 실현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
- 안배. 병행 기약하는 것
- 인기 영합적 내용 -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실현하는 것
 - 태화. 화해. 화합으로
 - 통일과 리시대를 불용

- 과거 증명 (2017)

-

◦ 平 吉 重

◦ 야당의 직선제 주장 → 인플레론 → (저지보복)
||
국론포동(양명)

◦ 「헌재사의 권한에 중시부능적자」는 거의 - 대통령

◦ 「야당을 여당인 경우를 해 보라」 → 국가경쟁의 이익

◦ 대타협 가능

◦ 김 경인 의원

- 헌법의 개헌 주장 -

- 헌법의 헌법의식 약함.

- 개헌의 필요성을 보지 - 범국민적 개헌 가능

Month

Date

day

PAGE

1. 보안서분: 인신구동인거기 제의 선으로 의해서 할수
타. 25.

o. 근로자의 권리: 적극적방장.

- 이익공유권: 경영참사권

- 당 개인선 없이
- 노동, 정동. → 동서
- 여권조사 결과에 의함

o. 주주감사권: (카르텔; 영리-)

비상감사권 ..

o - 비상임감사권

→ 위헌사건(헌법소원)

→ 5년거주요건

→ 6년당임

① 상인(영리)기업권:

- a. i) 위헌사건(헌법소원)
- ii)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 iii) 판례.

ii) 비상근거지선: 5차. 반정부 반공을 위한 선전
전파를 위한 악용 이각선 악용.
전사등에의 기여에로 대처.
6. 29 세전에 따라. 이를 식의해
법률에 의거한 것은 기류 1927.
기류 1927년 10월 27일 회 12으로 대처

iii) 국공감사선: 현행 국공감사선 활용 미흡.
국회기능 활성화 위하여. 국공감사선
인정 하리. 국가의 비극을 경험한 자
선서. 러상. 국공감사선 활용으로 국공감사선
활용 하리.

항의 • 헌법재판소 관할후가:

- 헌법소송 (헌법이 제2차 밖에 의한) 때문

「법률 제하는 헌법소송의 시간 (09:10) 법률 제정 후 하의 판) 제정 후 하의 판)

• 국정자문회의 § 66

→ 1명씩 국가안전회의

§ 66 ① 국정자문의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회의 구성되는 국정자문회의를 두 수 있다.

(법률? 제정?)

<국가안전회의>

• 평화통일자문회의 (§ 68)

(~~법률 제정~~ 평화통일자문회의)

(법률 제정 10 조항?)

[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정책자문회의]

선거事務 12 投票事務 (511)

선거運動, 國民投票權反對運動 (512) ①

..... 각종 선거권 위헌회의 반대하에
법률이 제각각 법치 안에서 하되, 준당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62.10.12. 국민투표법 제정 (한반운동에 대한 투쟁 운동)

○ 69년 국민투표법!

한반운동 가능

정당과 관공회 연합회까지

~~국민투표 제정 운동~~

온누리 집회 가는

(정당과 관공회: 군사역사회의)

73년 국민투표법! 한반운동 열기. 한국비정치사범(들)

국민투표 가능, 국회, 방위
연세 진흥한 정당, 방송, 선전물

이래리, 국민투표 요구한자 (관공회), 선전물

의사, 정당, 목사, 방송, 선전물

○ 국민투표 제정 (한반운동) 투쟁한 권력 운동

◦ 중앙은행의 독립성

주요: 1) 127③ 조는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차별 정책은 독립성으로 자유적으로
수행. 견제할 수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
한다.

- 한국은행: 찬성.

↑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 자유적인
수행. 집행과 견제한 중앙은행제도의
유지. 감축을 위하여 한층더 힘을 준다

- 재무부: 반대: 한층더 견제할 수 있다
1) 외부로 확대해서
재부의 재정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통화신용정책 수행 가능

2) 금융자유화의 확대를 위해서
18조와 127조 개정. 특히 127조
은 개정. 기업 활동 부분 많이
통화신용정책으로 재부의 재정정책
수행. 그러나 많은 한계 있음.
완전 독립성 필요

3) 외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함: 연방안
하의 특이한 변화 가능성 있는 경우

항의 ◦ 동유럽사적 배경

- 기획요: 1) 반대로
 ◦ 대안: 최근 동유럽의 수급조절과
 유럽주권의 개선에 노력하여
 개혁안정을 진정함으로써
 동유럽의 이익을 보호한다
- 동유럽의 수급조절은 자유시장경제
 정서 위배 우려
- 개혁을 추진하여도 자연재해 등 예상
 불가의 사유로 일시적 개혁 성과를
 막지 못할 경우 위험을 면치 못함

4-19 2024

(2)

제2: 420 ① 언론 자유권 헌법. 출판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한다. (헌법 21)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권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중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위하여 명확한 필요성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헌법 21)

③ 신문.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편제. 편성
(각각 공중안전. 방화 등에 의한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 (헌법 21))

④. (언론보상) (헌법 21)

제2: 421 ① 언론의 자유

② 언론. 출판. 영화. 연설에 대한 허가.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권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한시 규정)

제2: 418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③. 신문. 통신의 방송비대응 규정비율

5.20 ㉔

제2안 유지

대안: X 신분, 특선, 방응을 제1순위의 필수는
시행은 가능해야 함

비상유위하여 필수는

✓ 신분, 특선, 방응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한 제2안 방응은 필수가 있다.
신분은

(이성기)

특선, 방응의 시행기준과 신분의 공제성
을 보충하기 위한 제2안 방응은
필수이다

• 특선, 방응의 시행기준과 신분의 공제성

- 공적저축제도

<비공적저축>
연금저축펀드

(저축은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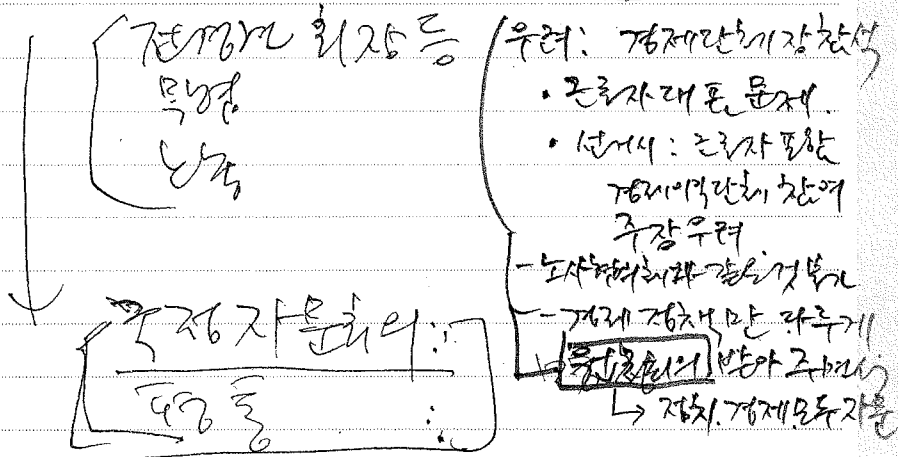
→ 4.19 항쟁의 민주이념

→ 부담없이 4.19의 민주이념
실현

→ 4.20 공적저축제도
보장된다.

- ① 1981년 1981. 이월연말 비저축용
(주) [✓ 저축 대상. 노년 (비공적저축)]
- ② ~~저축저축~~ [⊗ 1980. - : 저축한다.]

국민연금저축제도 → 드러



③ 국민연금저축제도 → 국민연금저축제도 → 국민연금저축제도
(국민연금저축제도에 넣는 것) → 국민연금저축제도

④ 국민연금저축제도 → 국민연금저축제도 → 국민연금저축제도

⑤ 국민연금저축제도 → 국민연금저축제도

- 연극
- 대안정치사상

1. 전환점. 청각 54②. ... 리어 그 정치적증거성을 보장된다

▽ 정치보복금지. • 저항권.

유구한 역사라 전통에 빚 받은 우리 대한호신은
3.1 운동의 독립정신으로 사랑 받^{대한민국}은 ^{헌정정부}의 잘못과 부패에
항거한 비구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역사적 사명이 임박하여. 정정. 인민 -- -- --

② ▽ 보안장본! 주도로 압수 (보안심화장본 → 탄압)

[사회 안전법 개정. 주선으로 타격
등 법개정은 정정, 인민 (차관)

③ ▽ 안전법연령: - 하층기 도입. 1951. 2년후 적용. (문헌 대안제시)

④ ▽ 101의 출현:

⑤ ▽ 부동권

6. 대동권 임기

7. 국회 개헌권 / 중무위원 우선임

8. 국민투표 찬반운출: - 대통령 선거 여야정 준비의 지의

9. 중앙선거: - 한쪽의 해방개헌 정권 (장관)
중립의장 → 양호정제로 개정 요구.

10. ▽ 개헌추진회의

(6개) 11. ▽ 헌법재판관 권한 추가문제: 국민직접제 → 국회의권 1/2 이상

87. 10. 12. 본회의
 < 신명민주주의 반대 토론 >

1. 상명민주주의 반대 토론 → 위헌논쟁제.
 - 대동령 장년 회의장의 건물에 넣는 것은 부당
 - 야당 : 위헌논쟁제의 관습이 27
2.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 반대
3. 직무유기인 해임소회의건 r
4. 대동령 임기. 5년 단임제. r
5. 권력 장악권. 이익 중립권 미반영 부당.
6. 「입법권양도」 → 「입헌권양도」 부당.
 - 헌법에서 공약회 처리 개사본
 - 1 회 라디오까지 주장 동양의 변화 증여하지 않은
 - 국민의사 수렴 안 된 것
 - 투표. 주권의 유인 회담이 관습이 지 기고
 - 국민의 권한이 아니다.
7. 헌법위원회에 훈수권한. 반헌운동. 6. 15 기사 투쟁제

